

# 착공도 못 했는데...조합원 전원 신용불량 '분통'

### 광주 광산구 A지역주택조합 집행부-조합원 '내홍' 386억 중도금 연체로 하루 이자만 2000만원씩 늘어 시공사 법정관리까지 '이중 악재'로 개발사업 표류

건설 경기 침체와 시공사 법정관리 여파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는 가운데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집행부 간 갈등으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며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중도금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190여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10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하산동 254-1번지 일대 59필지에 들어설 예정인 A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21년 설립 인가를 받았다. 사업 규모는 총 397세대로 당시 298명의 조합원이 참

여했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0층, 8개 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됐으며, 2022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뒤 지역의 B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 운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잇따르며 상황이 악화됐다. 집행부 운영 문제를 두고 두 차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집행부 교체도 반복됐다. 여기에 조합 운영 무효 소송과 조합원 탈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지연됐다.

여기에 시공사였던 B건설사가 2024년 4월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C건설사와 새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11월 총회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했다. 당시 조합원 수는 272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다. 금융기관 연합체인 대주단과 체결한 386억원 규모 중도금 대출의 만기(2월 8일)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대출이 연체 처리된 것이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개인 명의로 2억원 안팎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에 참여했고, 그동안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만기 연장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출이 일시에 연체됐고 현재 연체 이자는 하루 약 2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금융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조합원은 "193명이 신용불량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 연휴 이후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자동이체가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가 막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집행부가 대출 만기 일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연장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결국 집단 금융 피해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조합장 등 집행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조합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진행된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신분 확인과 출석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투표 절차도 허술했다"며 총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회를 다시 열어 집행부 교체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반면 조합 측은 '집단 신용불량 사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D조합장은 "중도금 상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연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조합원들과 함께 연체 이자를 정리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약 3억7000만원의 연체 이자를 납부하면 중도금 대출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조합장은 "아파트 건설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대출 연장 이후 시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중도금 실행 자사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야 사업을 정상-개도에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6:49	달림	01:26
맑음	18:36	달림	10:07



광주	☀️	0~12
목포	☀️	-1~8
여수	☀️	2~11
순천	☀️	-1~13
구례	☀️	-1~13
광주	☀️	-3~11
신도	☀️	-1~12
흑산도	☀️	3~8
진남	☀️	-2~12
진도	☀️	-1~9

목포	미물(고)	06:53 / 18:36
	쌀물(저)	11:58 / 23:54
여수	미물(고)	01:14 / 13:00
	쌀물(저)	07:22 / 19:16

### 광주전남 교장·교감 '명퇴' 5년 새 2배 급증

광주·전남 지역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교장·교감이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5년 시도별 교장·교감 명예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020년 5명(교장 4명·교감 1명)이던 명예퇴직자가 2025년 11명(교장 10명·교감 1명)으로 증가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14명(교장 10명·교감 4명)에서 24명(교장 23명·교감 1명)으로 확대되며 증가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관리자의 명예퇴직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초·중·고교의 경우 광주는 2명에서 9명으로,

전남은 8명에서 17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중등에서는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광주는 3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전남은 5명에서 7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초·중·고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장·교감은 2020년 250명에서 지난해 431명으로 늘어 약 72% 증가했다.

이처럼 관리자들의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장과 교감은 학사 운영 외에도 노무 관리,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폭력 대응, 학부모 민원 처리 등 다양한 현안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민수 기자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10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광주전남 탈핵을 외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핵연료 재처리 중단하라'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영평 한빛 핵발전소 1·2호기의 수명연장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굴 양식장 착취 이주노동자들 '강제 출국' 위기 모면

#### 전남 노동단체 “브로커, 증거·증업 삭제 시도” 주장

최근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의 브로커가 노동자들을 무단으로 출국시키려다 적발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필리핀 계절노동자 30여명이 브로커에 의해 강제 출국당할 예정이라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브로커가 노동자들을 출국시키려 한 것은 임금 착취 의혹 관련 증언과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도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는 지난 9일 오전 1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로커가 동료 노동자들을 새벽에 출국시키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9일 오전 6시 고흥군 영남면 사도마을의 브로커 사무실에 집결해 이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상황을 전달받은 법무부는 9일 오전 7시16분 고흥군에 해당 노동자들에게 대

한 출국 서류 조치를 통보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어업계절근로비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A씨(28·여)는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굴 작업을 했다. 첫 달 월급이 근로계약서상의 월급 209만원이 아닌 23만5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단체는 굴 양식장 등 사업주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을 인신매매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송태영 기자

### 서구, 공익단체 선거운동 의혹 선관위 신고

광주 서구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단체의 정치 활동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구는 10일 A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인사의 사생활 의혹을 언급하

며 해당 인사를 후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체 회장 B씨가 '새봄맞이 경찰활동'을 이유로 회원들을 모은 뒤 별도 안내 없이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시켜 약 15명의 회원이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서구 보고 있다. A단체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조선대 사거리 '도내기육교' 33년 만에 철거

#### 동구, 13~14일 공사...“교통약자 걷기 좋은 환경 조성”

광주 동구가 교통약자의 숙원 사업이었던 조선대학교 정문 사거리의 '도내기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한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1993년 서석동 1005-27번지 일원에 폭 3.5m, 길이 27.4m 규모로 조성된 도내기육교의 철거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동구는 13일 오후 11시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도내기육교 철거 작업을 진행한 뒤 이달 중순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육교는 설치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됐고 안전사고 우려도 컸다.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 동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 유모차 이용자와 같은 교통 약자들의 이용이 어려웠다.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육교 이름은 옛 도내기시장의 영향을 받았다. 도내기시장은 1965년부터 서석동, 동명동 일대에서 운영되다 사라진 전통시장으로, 인근 지역에 '도내기 시장'이라는 생이 있어 그 생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과 '뜨내기'를 일컫는 말이라는 견해가 있다.

지산동에서 조선대 정문 입구 방향의 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1987년 시장터 일부가 도로로 수용됐다. 도로 수용으로 인해 시장의 위세가 크게 위축·상실됐다.

육교는 설치 이후 옛 도내기시장을 설명하는 안내 표지판과 함께 시장의 존재를 알리려는 역할을 했다.

동구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주민, 서석초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동구장애인복지관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했고 광주시, 광주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동구는 제1제1육교(옛 이마트 동광점 앞), 남초고육교도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서구 쌍촌1육교(옛



광주 동구는 13일 오후 11시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도내기육교 철거 작업을 진행한 뒤 3월 중순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호남대 입구 앞), 2021년 10월 북구 수창육교와 동구 중앙육교가 철거됐고, 2022년 5월에는 서구 늘푸른구름다리, 2023년 11월 동구 계림육교가 2024년 4월 용봉천육교가 철거됐다.

동구 관계자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

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기육교가 철거되면 광주는 총 64개의 육교가 남는다. 자차구별로는 동구 2곳, 서구 14곳, 남구 10곳, 북구 17곳, 광산구 21곳이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 신종 마약 '러쉬' 투약 혐의 30대 불법체류자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청은 10일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신종 마약인 '러쉬'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광주 광산구 한 주거지에서 러쉬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드 성분이 함유된 액상으로,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군 마약류로 지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러쉬 10㎖를 6만원에 구매한 뒤 택배로 배송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마약 공급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